

민주당 공천 후유증 심각

당사점거 농성·자해 소동...

탈락 후보들 “밀실담합이 빚은 폭거”

시민단체 ‘하향식 전략공천’ 중단 촉구

광주지역 3개 구청장을 전략공천하고 일부 지역 단체장·도의원 후보를 확정된 민주당이 심각한 공천 후유증을 앓고 있다. 탈락 후보 지지자들이 공천에 불복해 당사 점거, 농성에 돌입하는가 하면 후보자들도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자해 소동까지 빚어지고 있다. 시민단체들도 ‘하향식 공천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소속의 신현구 서구청장 예비후보는 2일 오후 광주시당에서 기자회견 열고 ‘이번 공천은 무원칙한 밀실담합이 빚은 폭거’라며 전략공천 철회를 촉구했다. 신 후보는 “지난해 9월 이후 당내 지지뿐만 아니라 각종 여론조사 동향을 통해 열린우리당의 어떤 후보와 대결해도 승리할 수 있는 객관적 경쟁력이 입증됐음에도 정확히 근거조차 제시 못하는 이번 전략공천을 이해할 수 없다”며 1일 중앙당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신 후보 지지자 40여명은 기자회견 직후 유종필 광주시당위원장을 점거한 채 농성에 돌입했다.

역시 전략공천된 광주 북구청장 예비후보인 반명환 광주시의회 의장도 3일 기자회견을 갖고 전략공천의 부당성을 지적할 예정이다. 민주당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도

지난달 31일 광주지역 구청장의 전략공천 발표 이후 이를 강력히 비난하는 글들이 수십건 올라왔다. 한 네티즌은 “당이 예비후보들과 합의사항을 저버리고 전략공천을 하게 됐는지 유권자에게 경위를 설명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으며, 또 다른 네티즌은 “시민 배심원제와 여론조사를 한다면서 수많은 후보자와 유권자들을 기만했다”며 “후보 선정을 무효화하고 한화갑 대표를 퇴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남지역 모 의원의 경우 광역의원 후보 경쟁에서 탈락한 모 인사가 “다음 국회의원 선거때 보자”며 협박성 편지를 보내는가 하면 의원 사무실은 물론 집에도 공천 관련 협박 전화가 걸려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또한 전남지역 민주당 일부 국회의원은 글들이 수십건 올라왔다. 한 네티즌은 “당이 예비후보들과 합의사항을 저버리고 전략공천을 하게 됐는지 유권자에게 경위를 설명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으며, 또 다른 네티즌은 “시민 배심원제와 여론조사를 한다면서 수많은 후보자와 유권자들을 기만했다”며 “후보 선정을 무효화하고 한화갑 대표를 퇴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전남도의원 공천에서 탈락한 화순군의회 김모 전 의원의 지난달 30일 아예 항의해 자신의 손가락을 잘랐다.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 알려진 김 전 의원은 도의원 출마를 위해 최근 군의원을 사퇴했다. 전략공천과 관련 광주YMCA는 1일 성명을 통해 “각 정당이 전략공천 등 이름으로 하향식 공천의 구태를 재현하고 있다”며 “각 정당은 민의와 시민정서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하향식 공천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당선가능성이 높거나 당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는 이유로 문제가 있는 예비후보들의 출마를 묵인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예비후보자의 자결 검증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정당에 요구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당이 광주시 3개 구청장 후보 등을 전략 공천한 데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략공천 철회를 주장하며 2일 오후 광주시 서구 치평동 민주당 광주시당을 점거한 신현구 서구청장 예비후보 지지자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1조 2천억 ‘세금전쟁’

검찰, 론스타 수사 국세청 등과 공동전선

환수성공 여부 압수자료 분석 결과에 달려

대중 중앙수사부는 지난달 29일 론스타 한국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한 것을 시작으로 ‘2개 전쟁’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론스타의 횡령, 탈세, 외환도피, 외환은행 횡령매각 비리 의혹 등을 입증해 불법행위 연루자들을 처벌하려는 싸움을 걸고 벌이고 있다. 또 물밑에서는 국세청, 금감원과 공동전선을 구축해 ‘세금전쟁’을 은밀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세금전쟁에 돌입한 것은 론스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700여 상자 분량의 자료에서 외환은행 매각 및 스타타워빌딩 매각 차이들에 대한 법적 과세 근거를 확보한다면 최대 1조2천400억원의 세금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론스타 과세’ 공격과 방어 논리=과세 적법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되는 론스타의 수입은 4조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외환은행 매각차익과 역삼동 스타타워빌딩 매각차익의 2천800억원이다. 국세청은 외환은행 매각차익에 7

천억~1조1천억원, 스타타워빌딩 매각차익에 1천400억원 등 최대 1조2천400억원의 세금을 부과해 국부의 해외유출분을 최소화시킨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문제는 한국이 미국, 벨기에와 맺은 ‘이중과세방지 협정’으로 이는 미국이나 벨기에에 근거를 둔 법인이 우리나라에서 얻은 주식매매 차익에는 세금을 매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론스타 코리아가 외환은행 매각과정을 주도한 대리인이므로 론스타 코리아를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봐서 법인세나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스타타워빌딩 매각의 경우 론스타 측은 “매각의 실주체는 벨기에에 있는 스타홀딩스(론스타 코리아의 대주주)이고, 주식거래 형태로 싱가포르 투자자에 팔았으므로 세금을 낼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스타타워빌딩은 미국의 론스타 본사가 사고 팔았으므로 ‘부동산 과다법인의 주식’에

과세할 수 있다’는 한미간 조세협약에 따라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본다.

◇압수수색 자료서 ‘비밀병기’ 열 열개=론스타와 국세청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는 ‘세금전쟁’의 승패는 검찰이 압수한 자료분석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압수 자료에는 론스타가 1998년 한국에 처음 진출한 뒤 7~8년간 거래하면서 남긴 자료들과 영수증, 전표, 보고서 등이 총망라된 것으로 알려졌다.

론스타는 자산관리공사와 예금부 협공사의 부실채권 매입과 각종 부동산 매매에도 적극 관여했기 때문에 관련 서류와 증빙문서가 보관됐을 가능성도 높고 지난해 4월 국세청 세무조사 때 작성한 각종 보고서도 남아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검찰이 외환은행 매입 및 매각 과정에서 론스타 미국 본사와 론스타 코리아 간에 오간 각종 서류들을 발견한다면 이는 ‘세금전쟁’ 승리를 견인할 비밀병기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론스타 코리아가 국내 ‘고정사업장’으로서 외환은행 매매를 주도했음을 증명할 자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양재동 사옥 인허가 청와대 관련”

한나라당 ‘김재록 게이트’ 파상 공세

강봉균 “공직 떠난뒤 여행 문제 안돼”

‘김재록 게이트’와 관련 한나라당이 적극 공세에 나서 이번 파문이 정치쟁점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의 공세는 5월 지방선거와 4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삼바싸움에서 기선을 제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만 검찰 수사의 항배를 둘러싼 정치권내 미묘한 신경전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여권 인사들의 연루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호재를 놓치지 않겠다는 심사가 엿보인다.

한나라당의 공세 초점은 열린우리당 서울시장 후보로 유력시되는 강금실 전 법무장관과 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이다. 특히 당 일각에서 특혜시비 논란이 일고 있는 현대차 그룹의 서울 양재동 사옥 인·허가 지시가 서울시가 아닌, 청와대에서 나왔다는 주장까지 제기돼 주목된다.

이방호 정책위의장은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 강 정책위의장, 강 전 법무장관 등 이번 게이트에 관련된 인물들의 행적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원 기획위원장은 강 정책위의장이 김재록씨와 함께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 부부동반 여행을 다녀온 것도 문제를 삼았다.

이에 대해 우리당은 특히 “강봉균 정책위의장 위유 논란”에 이어 서울시장 후보로 공을 들여온 강금실 전 법무장관을 겨냥, 한나라당이 잇따라 의혹을 제기하자 “대응할 가치가 없다”며 “정치쟁점화 시도”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당사자인 강 정책위의장은 김재록씨와 함께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 부부동반 여행을 다녀온 것과 관련, “현직에 없을 때 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김재록씨가 아더앤더슨 본사에서 티켓이 나왔으니(올림픽에) 다녀오라고 해서 갔다는 것”이라며 “그 때는 장관을 할 때 아니고 공직에서 떠나고 난 뒤에 이뤄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또 하이텍쿠 컨소시엄의 진로 인수과정에서 강금실 전 장관이 대표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지평이 아더앤더슨과 한 팀을 이뤄 거래의 법률 자문료를 받았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 강 전 장관측은 “부당한 정치 공세로 강 전 장관은 의혹을 살 만한 일이 없다”며 “정치 공세에 대응할 가치를 못 느낀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한명숙 총리 지명자 재산 4억2천만원

한명숙 총리 지명자는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을 포함해 모두 4억2천146만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지명자는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한 총리 임명동의안 첨부자료에서 자신 명의의 재산을 ▲경기 일산 아파트와 사무실 전세권 1억9천만원 ▲예금 1억8천629만원으로 신고했다.

남편 박성준 성공회대 교수는 ▲경기 화정 아파트(1억5천300만원)와 경기 일산 아파트(2억8천490만원) ▲2억3천517만원이었다.

직계 비속의 병역사항과 관련, 위

아들인 박한길(21)씨가 지난해 2월 현역으로 육군에 입대해 복무중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원 세비가 소득의 대부분인 한 지명자는 각종 근로소득 세로 2001년 608만2천원, 2002년 701만원, 2003년 820만4천원, 2004년 222만2천원 등을 납부했으며 체납액은 없었다.

2004년 근로소득세가 현저하게 적은 이유는 2004년2월 환경부 장관에서 물러나 같은 해 6월 국회의원이 될 때까지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보좌진은 설명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정몽준의원 한나라 서울시장 후보?

‘강금실 대항마’ 영입설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의 열린우리당 서울시장 후보 출마 선언이 임박한 가운데 한나라당 일각에서 서울시장 후보의 외인사 영입론과 함께 무소속 정몽준(사진) 의원의 영입설이 흘러나오고 있어 정치권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2일 한나라당 고위 관계자는 “서울시장 후보 선출은 경선이 원칙이지만 열린우리당의 ‘강효리’



바람이 심상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당 내 부적으로 외인사 영입론이 흘러나오고 있다”며 “정몽준 의원은 물론 정운찬 서울대 총장, 어윤대 고려대 총장, 안철수 대표,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 오세훈 전 의원 등도 영입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최신 의료정보와 선진 의료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김평남내과가 함께 하겠습니다.

호남 최초 최고의 관절염 전문병원
부드러운 움직임, 건강한 노후생활...

김평남내과

문의 및 예약전화 062-233-7575~6

김평남내과 김평남 Kim's Rheumatism Clinic

54

YOUNG NAM KIM

The National Dan's Clinic